

“정책방향에 공감... 전북 발전 위해”

민주 김윤덕 의원, 대선 후보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 “작년부터 지지... 정권 재창출로 이기는 대선 돼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갑·재선)이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이 지사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전북도지사에게 출마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정사회’ 등 이 지사의 정책들이 한국사회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 지사를 지지했고 당시의 지지율보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했다”며 “이러한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보다 더 폭넓은 지지층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은 타당 후보

보다 우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수밖에 없었다”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지사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결코 쉽지 않은 이번 대선을 이기려면 이 지사가 빨리 민주당 후보가 돼서 주력문제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선 연기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은 아마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반등한다면 제3의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점으로 “전북지사가 단순히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 속에서 존재한다”며 “이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힘 있는 도지사가 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점으로는 이 지사를 위한 민주당 경선과 도지사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는 현재 이 지사를 지지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20여개 조직이 이 지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사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SNS를 활성화시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에 특단 조치 마련할 때까지”

민주 김수홍 의원, 국토부 앞 무기한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국가개발도상계획에 전북이 요청한 7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 1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전북패싱 논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이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8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전북패싱 강력 규탄한다!”, “제4차국가개발도상계획 즉각 수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이날 2시간여 동안의 시위

를 끝내고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을 방문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전북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나후된 전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제4차국가개발도상계획에서 전북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북권 사업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사 마무리

전북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지난 21일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3,43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87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4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9조3,434억원 중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 행사 5,000만원 등 총 4건 2억 6,541만3,000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3조5,879억원 중 중점사업 증축(비품구입) 2,000만원 등 총 3건 5,118만5,000원을 삭감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1인 10만원)을 원안 처리했다.

한편, 의회관련 예산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형평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사업(1억원), 축사 살균사업 등 지원사업(3,0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8,500만원) 등의 예산도 삭감 내 부유보급에 반영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사별관 증축, 폐교 재건사업, 기관운영경비는 지급하지 않은 경비 및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전액 삭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의 비전 놓고 열린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 in 전북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가 열린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열린 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못한다

민주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은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도자치경찰위 초대 위원 구성

전북도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7명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학계와 법조계, 경찰, 지방행정 전문가 출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7명 위원은 ▲이영규 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전 정읍경찰서장 ▲방준원 전 김제경찰서장 ▲이종석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다. /유호상 기자

“지지부진한 도내 현안 속도 내기 위해 소통 병행돼야”

김희수 도의원, 소통행정 강조

전북도가 주요 현안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도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은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지지부진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도민과의 공감은 물론, 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의 활발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북이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농어촌 관련 사업이 성과와 다르게 도정

앞을 에워싼 곤포사일리자로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도민이 환영하고 공감하는 ‘삼락농정’을 위해 더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소통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초 ‘수소 용품 검사 지원센터’ 유치를 성공시킨 전북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미준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같은 일이 ‘수소도시 전북’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며 “2023년까지 확충 계획된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전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된 지난 2017년 이후 단 8개의 금융기관만이 이전됐다”며 “배력적인 경우요건과 해외비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항과 SOC 확충을 위해 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전북도의 총력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소방공무원 합당 처우·근무환경 개선을”

김대중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24일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매 순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신분이 변경됐지만 근무환경과 처우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소방관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와 인력은



영비 등을 지원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상화된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한옥진흥정책, 지방소멸 극복 방안”

이정린 도의원, 추진 요청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 1)이 24일 5분 발언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옥진흥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주한옥마을, 완주이원고택, 남원동심재고택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한옥은 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면서 “전



북도가 한옥 진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소멸 가능성이 심각한 도내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등 직·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